

한나라, 광주·전남 정책협의회서 무슨 얘기 했나

# “국회 정상화 되는 대로 F1 특별법 처리”

### 광주에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도로·철도 등 박람회 인프라 최대 지원 ‘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등은 확답 안해

광주·전남 민생생기기에 나선 한나라당 지도부는 광주·전남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 전폭 지원, 지역 인재 등용을 내세우며 호남 지역 민심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광주의 대형 사업인 첨단의료 융·복합단지(사업비 5조6천억원), 신재생 에너지복합단지(4조3천억원), 문화복합단지조성(3조6천억원)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확답을 피했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잇따라 열린 한나라당-광주시·전남도 정책협의회에는 박희태 대표, 허태열 최고위원,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12명이 총출동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우선 호남 지역 인재 등용을 약속했다. 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례회 등에서 호남을 비롯해 지방의 능력있는 인물을 요직에

중용하겠다고 말했고 대통령도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광주시=한나라당 지도부는 광주시의 역점사업인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아시아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이 6개월째 공석 중인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에서도 덕담 있고 사명감을 갖춘 인물을 적극 추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이 적극 지원의지를 표명한 광주시의 주요 신규사업은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800억원)과 가전로봇산업 육성(900억원), 미래형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사업비 3천억원), 국립다문화센터 건립(1천600억원) 등이다. 내년엔 개최될 광주엑스포 사업비, 현재 건립이 추진중인 국립과학관건립사업비 지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광주시의 첨단의료 융·복합단지, 신재생 에너지복합단지 등



박희태(오른쪽에서 두번째)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14일 광주시와 전남도를 차례로 방문, 지역 현안사업을 점검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정부측과 이들 사업을 검토했으나 수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신속히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임의장은 또 “이밖에 광주시에서 지원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내년 국회 예

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남도=한나라당 지도부는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F1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나라당 의원 38명, 민주당 35명 등 총 79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가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특별법이 차질없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

해 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안 압해~암태 간 새천년대교(국비 7천971억원) 건설도 다짐했다.

특히 박희태 대표 최고위원은 “전남의 최대 마스터플랜인 J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당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더욱 쏟겠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이럴거면 뭐하러 왔나”

한 지도부 2인자도 프레젠테이션 안듣고 자리 떠

“이럴 거면 뭐하러 왔나...” 14일 한나라당 지도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보고회를 지켜본 지역민 등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공성진·박순자·박재순·허태열 최고위원,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낮 12시15분께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 도착,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 상황·향후 일정 등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애초 예정보다 늦어진 일정을 감안, 문광부가 15분 분량으로 축소한 프레젠테이션조차 제대로 듣지 않았다.

시작된 지 3분여 만에 공성진 위원이 자리를 떴고, 허태열·박순자 최고위원도 뒤따라 빠져나갔다.

그나마 박 위원의 경우 한나라당 측은 “몰이 아파 쉬러 가는 것”이라고 했다가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돌아오기도 했다.

공성진·허태열 의원은 전남도 현안 설명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고 일정을 이유로 곧바로 상경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또 문화중심도시 현장 시찰 계획도 홍보관 6층에서 내려다보는 것으로 대신했다. 홍보관 앞에 도착, 버스에 오르기까지 30분 남짓한 행사였다.

이 때문에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가뜩이나 광배한 반 한나라당 정서와 불신감을 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

## 국회 원구성 협상 또 결렬

가축법 타결 실패... 김의장 18일 직권상정 시사

여야는 14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 다시 18대 국회 원구성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끝까지 합의하지 않아 원구성 협상이 결렬됐다”며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의 뜻이 결국 반영돼서 가축법 개정이 무산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임기 시작 77일째에도 원구성 협상조차 타결하지 못한채 극심한 파행 사태를 이어나가게 됐다.

김형욱 국회의장은 협상 실패 직후 담화문을 통해 “18일 12시까지 반드시 원구성 협상을 끝내 달라”면서 “그때까지 타결이 안 될 경우 불가피하게 국회를 살리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혀 지정 시각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 개정 및 상임위 정수조정안’ 개정안 직권상정 방

침을 시사했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18대 국회는 통과 제1호 법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18일 원구성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당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로 19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몫으로 확정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당의 모임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막판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개정된 가축법 내용을 향후 체결되는 최고기 협상에만 적용하는 부칙을 신설,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윤석·유성엽 의원 복당 싸고 민주당, DJ·김원기 눈치보기

박지원, 김영록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이뤄진 가운데 강은태, 이무영, 이윤석, 유성엽 의원 등 나머지 4명의 호남 무소속 의원 복당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 유지가 결정되는 강은태, 이무영 의원의 경우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이후에 복당 심사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복당 여부가 결정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관심 대상은 이윤석, 유성엽 의원. 민주당은 오는 21일 당무회의에서 이들의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외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 모두 당 외부 인사들의 영향력이 두 의원 복당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따르면 이 의원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당 지도부 때문에 복당이 쉽게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의 총선 패배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덜덜 이 의원의 복당을 허용할 경우 김 전 대통령을 서운하게 한다는 정서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지난 2003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일을 상기시키며 복당 불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박지원 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김 전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

다.

유 의원의 경우는 국회의장을 지낸 전북 지역 정치원으로 김원기 전 의원이 복당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애초 김 전 의원과 유 의원 관계는 돈독했으나 유 의원이 정음시장을 한번 지낸 후 바로 전북지사에 출마하면서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즉 유 의원이 김 전 의원의 만류를 무릅쓰고 도지사 출마를 결행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 이·유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복당을 막을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진통이 있었지만 결국 복당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